

혼인율 특성, 변화요인 분석과 가족정책 제언

A Crit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the Changes in Marriage Rates and Recommendations for Family Policy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정현숙*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Professor : Chung, Hyun-Sook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in Korea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family policy. Based on the "The Report of Marriage & Divorce Statistics in 2005" and data from th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 of the National Statistics Organization, the trends, reasons for marriage rates changes, and future expectations were critically review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was analyzed. The principl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rates are as follows: 1) the M-shape of the longitudinal crude marriage rates; 2) the increased age of individuals entering their first marriage; 3) the increase in remarriage rates; 4) the changes in the patterns of remarriage; 5) the increased in the age at which individuals remarry and; 6) the increase in marriage to non-Koreans. The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changes are a permanent normative shift because of 1) later marriage because of women's increased educatio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2) rational choices about birth control 3) reduced population because of the aging of baby boomers 4) structural changes in the marriage market and 5) egalitarian changes in wom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family.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family policy were as follows: 1) the need for a realistic, long-term family policy because the current marriage patterns will continue; 2) the need to develop new statistics such as fertility rates that are based on marriage cohort or birth cohort because family behavior is a mixture of personal, social and political responses; 3) the need for impact analysis of current family policy about increasing fertility rates; 4) the need for a new family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diverse marriage and family patterns; 5) the need to focus on men's role in families because of women's changing roles and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6) the need for preventive family policies such as family life education.

▲주요어(Key Words) : 혼인율(marriage rate), 출산율(birth rate), 재혼율(remarriage rate), 혼인(marriage), 가족정책(family policy)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가족단위의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함께, 가족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하는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가족문제는 경제, 노동, 복지, 의료, 교육 등 모든 사회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가족상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가족구조의 다양성, 결혼연령 상승, 혼인율 감소, 재혼율, 사실혼 커플, 동성애 커플, 국제결혼의 증가 및 입양과 인공수정의 증가 등을 21세기 가족변화로 지적하였다. 특히 혼인율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가족 이데올로기의

* 주 저 자 : 정현숙 (E-mail : hschung@smu.ac.kr)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2005년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이러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현재 4,800만여 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에 1600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자들과 대중매체에서도 낮은 출산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혼인율과 출산율의 원인을 파악하는 관련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족행동 분석에 거시적, 미시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지 않았다. 결혼은 경제적, 정서적 행위이며 또한 정치적 행위이지만(Waite & Gallagher, 2000),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사회의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상호관련성과 가족원들의 행동자(actor)로서의 영향이 간과되어왔다. 예를 들면, 1996년부터 3년간 조혼인율은 9.4, 8.4, 8.0으로 1997년의 IMF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즉, IMF로 가정경제가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이 결혼을 연기하게 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선택이 어려워지는 등 사회환경과 가족행동은 미시적 거시적 환경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따라서 결혼과 가족행동은 거시적인 사회환경, 인구구조, 역사적 영향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의 내적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이 단기적인 통계지표와 조혼인율 등 인구구조에 민감한 인구지표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 통계청 보도자료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자료만을 언론에 공개한다. 혼인율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 양상을 보이지만, 1970년 이후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면 매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결혼과 가족행동은 일련의 과정이므로 종단적 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져야 한다. 또한 인구통계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인구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인구의 연령구조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정책논의의 핵심에 있는 조혼인율, 조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은 인구구조에 매우 민감한 수치이므로, 인구구조가 다른 국가간 비교에는 적절치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Hantrais, 2004). 예를 들면 UNFPA가 집계한 우리나라 2006년 합계출산율 1.19는 2001~2005년 합계출산율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추이를 예측해 2006년 출산율을 산출한 것이다. 즉, 이 시기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가임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혼인율과 출산율이 다른 시기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시기를 기준으로 한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합계출산율이 계산된다. 이러한 이유로 EU통합 후 국가간 비교를 위해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s)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합계출산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율의 종단적인 변화 특성

을 고려하고, 인구구조와 연령구조를 기초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행동 이해를 위해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가족정책이 인구정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그러나 혼인에 관한 통계청의 자료는 혼인율과 재혼율 등 혼인과 관련된 통계와 혼인과 재혼의 연령과 연령차, 혼인의 대상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 각각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제언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초혼과 재혼의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인율 자료가 초혼과 재혼을 구별하지 않고 분석이 이루어진다. 혼인은 가족형성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므로 혼인행동전반에 대한 내용이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혼인과 관련된 정책제언을 위해서는 혼인율뿐만 아니라 혼인의 종류, 연령과 대상 등 혼인행동 전반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혼인율과 출산율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학자들(전광희, 2002; 장혜경, 2004; 이시원 · 김영기 · 이성진 · 하상근, 2004)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석한다. 한 가지는 인구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혼인상태, 혼인연령, 피임도구 활용, 생식력 등의 영향이며, 또 한 가지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여성의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율, 보육서비스 활용가능성, 경제성장 및 규범적인 요인 등 거시적인 환경적 영향요인이다. 이상의 요인 중 어떠한 요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출산율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혼인율의 감소와 여성의 취업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윤소영, 2005),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원인을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기피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거시적 집합적 자료(aggregate data)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이러한 논의의 가능성은 있지만, 미시적 가족행동을 통해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복지정책 제언을 위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가족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가족형성의 가장 기초인 혼인율을 중심으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연구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혼인율의 특성과 원인분석을 거시적인 사회환경, 인구구조, 역사적 영향과 미시적인 가족원들의 내적과정 및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기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행동의 종단적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변화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저출산이 혼인과 출산에 대한 거부인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통계청의 보도자료, 통계시스템자

료(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와 혼인과 출산에 관한 문헌을 이용한 2차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중 혼인율관련 자료, 통계청 KOSIS의 장기시계열과 함께 집합적 자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미시적측면의 혼인과 관련된 기존 관련연구와 문헌을 함께 분석하여 혼인율의 특징, 변화원인 및 미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문헌과 KOSIS의 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연령급간별, 출산순위별 출생자녀수의 분석을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실정에 맞는 미래의 가족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우리나라 가족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가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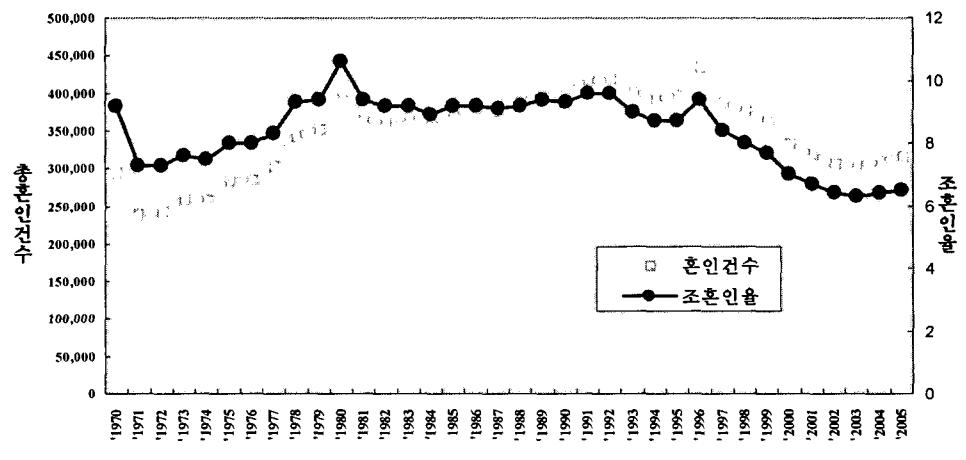
II. 우리나라 혼인율 특성, 변화원인 및 미래추이 분석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읍·면사무소 또는 시·구청(재외 국민은 재외공관)에 신고한 혼인 및 이혼신고서의 인구동태 항목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집계한 결과이다. 2005년 혼인건수는 미혼자(사별·이혼 포함) 중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건이며 혼전동거 등은 포함하지 않는 통계이다. 특히 본 통계는 초혼과 재혼이 모두 포함된 수치이지만, 시계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의 보도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혼인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조혼인율의 특성 및 변화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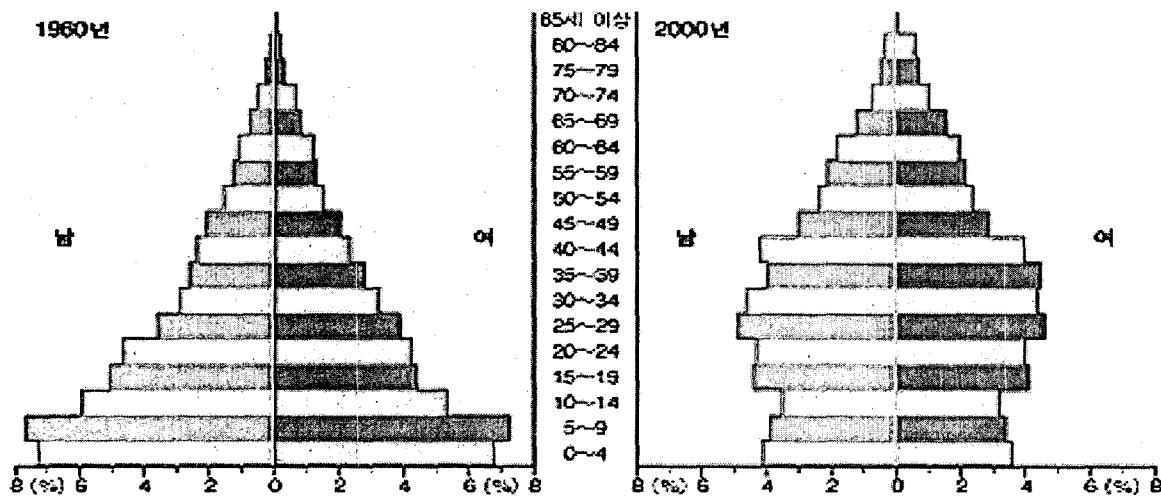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시간에 따른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의 추이를 재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조혼인율과 혼인건수는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는데, 1970년대 초 감소하다 1980년대 정상을 이루고 고원현상을 나타낸다. 1996년에 다시 정점을 이룬 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을 나타낸다.

2005년의 총 혼인건수는 316만 4천 건이며,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인 조인혼율은 6.5로 EU 15개국 평균 5.1보다는 매우 높다 <그림 1>과 같은 조혼인율의 증감의 변화 양상은 몇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 할 수 있다. 첫째, 조혼인율의 궤적은 인구구조의 특징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인구학적 자료는 인구구조에 매우 민감한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 인구구조는 <그림 2>의 우측과 같은 종형구조이며 이는 전쟁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1세대와 그 자녀 세대인 베이비붐 에코세대, 즉 베이비붐 2세대로 구분되는데, 6·25전쟁 후 복구기인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1세대,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2세대라고 명명한다. 베이비붐 1세대의 경우 출생 시기에 있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1955년생부터 산아(產兒)제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1년생까지를 베이비붐 1세대로 보는 의견이 많다. 베이비붐 1세대가 출생한 이 시기에는 무려 567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사이의 출생자보다 무려 180여만 명이 많은 숫자이며, 전쟁 발발 전보다 10% 높아진 숫자로써 전쟁기간 대비 25%의 출생



*통계청의 통계시스템 자료 재구성

<그림 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04)



*자료: 통계청(196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04) 도표로 보는 통계

<그림 2> 1960년과 2000년의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를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들은 2000년에 39~45세에 해당하는 연령이므로, 1980년대의 혼인율 증가는 베이비붐 1세대가 결혼하는 시기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혼인율을 보이게 된다. 1990년대의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도 이들 세대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결혼율의 증가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베이비붐 2세대가 결혼 연령에 도달해 이들로 인해 당분간 혼인율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은 2005년의 혼인율 증가로 입증이 되고 있다.

두 번째 혼인율 궤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 <그림 1>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1970, 1980, IMF 이전에 상대적으로 혼인율이 높다. 반면 오일쇼크와 정치적 혼란기인 1972~1973년, 1979~80년과 1997년 IMF시기의 혼인율은 급격히 감소한다. 최근의 이혼의 원인을 살펴보면 경제적문제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배우자선택시에도 경제적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은기수(2002)는 혼인지연이 실업의 장기화, 청년실업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저출산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성한기(1997)의 연구에서도 결혼상대자의 조건으로 1위가 성격, 2위가 능력으로 나타나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 Furstenberg(2003)는 미국사회에서 결혼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계급화의 원인이며 또한 결과하는 점을 강조한다. 결혼을 위한 경제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결혼이 사치성 소비재가 되도록 하였으며, 점차 증가하는 소득의 차이는 결혼의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결국 결혼은 사치스런 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혼인비용 통

계는 경제력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2000년에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평균 결혼 지출비용은 각각 5천3백만, 2천4백만 원으로 신랑이 신부보다 2배 이상 많았다(중앙일보, 2001. 3. 23.). 결혼비용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결혼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자금(59%)이고 이를 남성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랑의 결혼지출비용이 신부보다 많다. 따라서 IMF 이후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은 혼인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즉, 1995년 이후의 혼인율 감소는 젊은이들의 혼인기 피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김승권과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 28~34세 미혼남녀 중 현재 미혼상태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3%나 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주택값의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소득층 남성의 비자발적 혼인율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 혼인율 궤적의 변화 원인, 특히 1995년 이후 혼인감소추세는 젊은이들의 만혼경향으로 일정기간 결혼을 늦추게 됨에 따라 일정시기 동안 혼인율이 하락한 결과이며, 일정연령에 도달한 결혼연령의 남녀가 결혼을 다시 시작하면서 2004년 혼인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령별 미혼율 추세를 살펴보면 25~29세 연령층의 미혼율은 1970년 10%에서 2000년 40%로 증가했고, 30~34세 연령층에서는 1970년 1%에서 2000년에 11%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남성의 미혼율은 25~29세 연령층에서 43%에서 71%로 증가했고, 30~34세 연령층에서도 6%에서 28%로 늘어났다(김승권 외, 2000). 이러한 경향을 Gilbert와 Von Voorhis(2003)는 Delayed-choice hypothesis

로 설명한다. 즉, 고학력, 평균수명 증가, 불임기술발달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결혼의 시기를 늦춰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EU의 평균출산연령은 1987년 27.8세에서, 1996년 29세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단기적인 혼인율과 출산율 하락 후 200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대졸 출신여성들의 취업률증가로 일정기간 만혼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혼인율 감소와 함께 일시적인 출산율감소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혼연령의 상승에 의한 혼인율의 일시적인 감소현상은 2004년 상반기 연령대별 출산율을 분석하면 명백해진다. 이시기의 30대 초반 여성 출산율이 49%를 차지해 28%인 20대 후반을 앞질렀으며, 35살에서 39살 여성의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5%로 급증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 국정감사 자료, 2005). 따라서 당분간 혼인율은 증가할 것이며 2000년대의 10대가 결혼시기에 도달하는 2010년 이후에 혼인율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재혼율의 증가추이, 이혼자들의 재혼 증가 및 재이혼의 증가를 볼 때 당분간 혼인율은 증가할 것이며 혼인율 추이는 일정부분 인구파라미드의 곡선을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네 번째 혼인율 케이스변화 원인은 미시적 특성으로 1995년 이후 여성들의 결혼기피 현상으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즉, 1995년 이후 전반적인 혼인율의 하락은 인구구조의 변화에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 결혼 후 일과 가족을 조화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및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2003년 전체의 48.9%이며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취업여성 중 결혼한 여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여성취업자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혼여성 중 학령전기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60%이상으로 이러한 추세는 197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연구연보, 각년도). 특히 대졸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족에서의 여성의 취업은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지만, 역할갈등과 다양한 긴장원으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긴장수준과 부부간의 갈등은 매우 크며 이러한 갈등이 가족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일과 가족의 양립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및 제도의 미비는 결혼기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Galinsky, 1999). 최경수(2003)도 경제학적으로 자녀의 질에 대한 선호, 자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여성의 시간기회비용의 증가가 혼인율감소 및 저출산과 관련이 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우리나라만의 특성은 아니다. Gilbert 와 Von Voorhis(2003)는 경제학자인 Joseph Schumpeter의 이론을 이용하여 “라이프스타일 가정”으로 이러한 여성들의 특성을 설명한다. Schumpeter는 경제학의 기본가정인 이기심(self-interest), 가족가치의 변화에 대한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희생이 클 때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여성이나 다른 생활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Warren과 Tyagi(2003)도 미국의 소비자파산조사를 통해 결혼한 맞벌이가족의 여성의 파산신청을 하게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 자녀출산이라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 중 무자녀보다 유자녀 가족의 파산 신청율이 2배나 높으며,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은 무자녀 독신여성들보다 3배나 파산율이 높다. 그 이유는 종류총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마지막 한 푼까지 투자해야하고, 종류총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그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녀가 있는 가족의 1/7인 500만 가구가 파산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맞벌이 뒷(two-income trap)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여성들의 자발적인 독신선택과 남성들의 비자발적인 독신선택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혼인율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1995년 이후 혼인율의 하락은 가족의 기능변화로 인해 결혼으로 얻게 되는 이익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학자인 G. Becker는 결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모의 효과¹⁾와 보험효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의 증가와 특히 최근의 기러기 가족들의 경우는 규모의 효과가 도전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부양에 대한 태도변화를 볼 때 가족이 더 이상 돌봄 노동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자식이 부모를 노후에 모셔야 한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통계청, 1994, 1998). 전통적인 결혼에서는 결혼동기가 자녀출산에 있었으며, 이들을 통한 노후안정이 중요한 가치였으나 이러한 가치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은 점차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1) 규모의 효과는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 함께 사는 것이 한 사람당 식비나 주거비 등 생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효과는 늙어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배우자나 자식들한테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1995년 이후 혼인율의 감소는 전반적인 성역할의 변화로 인한 결혼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성역할의 변화는 성적가치와 결혼행동, 출산에 대한 태도 등 가족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획득과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재생산이 선택적으로 바뀌었으며, 가사노동 역시 경제력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자녀양육도 외부의 양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Giddens, 2003). 또한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세계화 및 정보화는 여성의 지위변화와 연결되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과 일 뿐만 아니라 여성자신의 정체감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으며(Skolnick & Skolnick, 2003), 결과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Browning(2000)은 결혼의 의미가 자연적인 성향, 사회적 계약, 사회적인 미덕, 종교적 실체, 상호보호와 만족의 5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문화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박민자(2004)는 1980년대 이후 혼인관련논문분석을 통해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혼인제도가 제도적 결혼에서 우애적 혼인의 의미로 변화되었으며, 2000년 이후는 결혼의 의미를 개인의 성장, 자아실현 등 개인중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 즉, 관계를 통한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가족에서는 정서적 친밀감에 바탕을 둔 부부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현대적 관점에서의 결혼은 일상의 삶에서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성과 평등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Giddens, 2003; Mason et al., 2003). 결혼의 유지는 부부관계에서의 보상이 관계 지속의 요인이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평등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인 원리에 기반을 둔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Giddens(2003)는 성적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는 구조상으로는 핵가족으로 살지만 친인척과의 관계가 돈독한 수정확대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가부장적 직계가족의 원리가 지배한다. 그러나 우애적 혼인과 평등적 부부관계를 원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불평등적 가족제도에 대한 거부로 독신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로 촉발된 성역할 변화로 인한 결혼에 대한 변화된 태도는 앞으로 세대간에 전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Gerson(2003)은 가족의 변화와 역동성 -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족 등 비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성장한 -을 경험한 13세에서 30세(Gerson 은 이들을 “성혁명 세대”의 자녀라고 명명함) 젊은이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삶의 경험이 인생관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다. 이들은 부모보다 좋은 직업을 원하며, 맞벌이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안락과 평등적 결혼을 원하지만, 일과 가족과의 균형과, 결혼에서의 개인의 자율성과 상호헌신의 균형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고 한다. 이들이 겪는 덜레마는 새로운 미래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는 선택으로서의 결혼과 출산의 형태로 나타나고,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2세대에 해당되는 2006년 23-27세 집단이다. 이들이 Gerson의 예측대로 행동할 것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행동은 우리나라 결혼과 가족의 변화양상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로 1995년 이후의 혼인율 하락은 혼인에 대한 사회화 부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Hernandez와 Myers (2003)는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자원의 증가, 형제수의 감소, 부모가 아닌 사람에 의한 양육의 증가, 가정경제의 향상, 교육열의 증가로 인한 교육기회 확대가 자녀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특히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형제수의 감소는 가족에서 돌봄과 친밀한 동료애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경제력이 향상된 소자녀가족의 자녀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확대된다. 그러나 이들은 바쁜 맞벌이 부모와의 교류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형제관계도 제한되면서 결혼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인간관계의 기회가 제한된다. 즉, 미국의 경우 가정경제향상으로 얻게 된 자녀들의 새로운 기회와 경험이 결혼에 대한 비사회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본작가인 가야마 리카(2005)는 결혼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행복과 별개로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가야마는 젊은 세대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기회가 제한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 결혼하지 않는 여성 집단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결혼은 왜 해도 무섭고 안 해도 무서운 것이 되고 말았는지를 분석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기가 필요하며, 그 결과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꿈도 희망도 아닌 ‘협박’이 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2004년의 일시적 혼인율 증가는 다음에서 설명 할 재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혼인율 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비교가족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원인과 정책의 효율성 등도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의 상승과 변화요인

두 번째 혼인관련 통계의 특징은 평균 초혼연령과 재혼연령의 상승이다. 2005년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0.9, 여자 27.7세이다. 이러한 수치는 EU15개국의 평균 초혼연령인 남자 30.3세, 여자 28.1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5년의 혼인율을 연령별로는 분석하면, 남자는 25~29세(34.5%), 30~34세(32.9%), 여자는 20~24(15.5%) 25~29세(46.5%), 30~34세(7%)의 혼인이 많다. 10대와 20대 혼인율은 점차 감소하며, 45세 이후 만혼은 남성 9.9%, 여성 6.0%로 1990년 이후 증가추세이다. 특히 혼인자 중 남성만혼자가 여성보다 많다. 이와 함께 평균 재혼연령도 상승하여, 2005년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4.1세, 여자 39.6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7세, 여자는 4.0세 높아졌다.

만혼현상의 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 가능한데 첫째,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30%대에서, 1994년 이후 45.3%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74.2%에 달한다(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이러한 현상은 앞의 <그림 1>의 그래프에서 혼인건수가 1996년에 다시 정점을 이룬 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4년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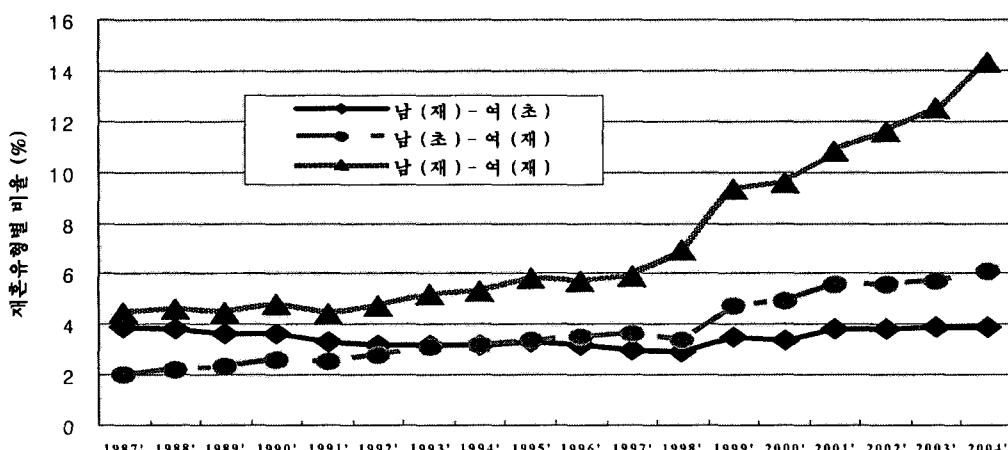
두 번째는 여성들의 취업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취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자 중에서 미혼과 기혼의 역전현상은 1985년 이후 지속된 현상으로 200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취업여성 중 미혼은 24.7%, 결혼자수는 75.3%이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취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일정기간 계속될 것이다.

3. 전체 혼인 중 재혼비율의 상승 및 재혼 구성비율의 변화 및 원인

우리나라 혼인의 세 번째 특징은 전체 혼인 중 재혼비율의 상승 및 재혼 구성비율의 변화이다. 전반적으로 1996년을 정점으로 혼인건수는 감소하나,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2005년에는 재혼이 전체 결혼의 26.1%에 이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재혼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재혼율의 변화와 함께 재혼 비율의 변화(그림 3)도 두드러진다. 2005년 재혼의 구성비율은 남(재혼)+여(초혼) 4.1%, 남(초혼)+여(재혼) 6.4%, 남여 모두 재혼이 14.7%로 남녀모두 재혼과 남(초혼)+여(재혼)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즉, 재혼 중 남녀모두 재혼인 비율이 전체 재혼건수의 70%를 차지하며, 남자가 초혼인 재혼이 재혼 전체의 30%로 변화된 결혼태도를 볼 수 있다.

재혼의 증가 및 재혼구조의 변화는 첫째, 결혼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결혼시장에서의 유용자원가정(availability hypothesis)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4년 이후 일시 감소하고 있으나, 1980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혼자수는 12만 9천 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이혼자 중 결혼 0~5년이 25.2%, 5~10년이 22.9%로 전체 이혼의 약 50%가 결혼 10년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젊은 이혼 집단들이 잠재적인 재혼집단이 되면서 결혼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재혼에 대한 태도변화를 들 수 있다. 재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 것과, 여성들의 경제력으로 인한 선택권이 증가한 것, 결혼적령이나 연령차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 세 가지 영역의 태도변



*자료: 통계청 시계열자료 분석

<그림 3> 재혼유형별 비율: 1987-2004년

화를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혼과 재혼에 대한 편견의 감소는 재혼의 패턴에 잘 나타나 있다. 전체 재혼 중 남녀모두 재혼인 비율이 전체 재혼건수의 70%를 차지하며, 남자가 초혼인 재혼이 재혼 전체의 30%로 나타난 것은 재혼에 대한 급격한 태도 변화라 볼 수 있다. 가정법률상담소(2003)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55.4%를 차지하며, 정현숙과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재혼가족의 전혼해체 사유가 사별(32.7%)보다 이혼(65.3%)이 많았다. 결혼시장에서 이혼자들의 증가는 파트너 모두 재혼 비율을 높이며, 또한 재혼율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한 이혼자끼리의 재혼은 서로의 아픈 경험이 새로운 결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이혼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재혼율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에 대한 기피나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의 지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임을 입증해 주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둘째, 재혼시장에서 여성들의 선택권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초혼남자와 재혼여자와의 결합을 앞에서 설명한 Schumpeter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익과 비용을 고려한 여성들의 선택적 행동의 결과이라는 것이다. 고학력과 취업으로 인한 경제력은 여성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고, 이러한 경제력은 여성들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쳐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점차 경제력이 배우자선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경제력 있는 이혼여성의 재혼시장에서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초혼의 남자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세 번째로 재혼패턴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재혼에 대한 태도 변화 중 하나는 기존의 결혼적령기나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재혼시장에서 여자연상과 동갑의 결혼이 증가하고, 여성재혼과 남성초혼 커플의 증가는 기존의 결혼에 대한 신화에 도전한다. 배우자 선택에서 경제력이 중요한 선택의 지표가 되며, 오래 함께하는 결혼(longevity) 보다는 결혼의 질을 강조하는 선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법률상담소(2003)와 정현숙 등(2000)의 연구결과 재혼시 본인의 전혼자녀와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혼가족이 많은 수가 계부모가족으로 다른 가족형태보다 구조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의 이혼율

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 예로 영국과 미국의 결혼에 대한 이혼율은 40%와 50%인 반면, 두 국가모두 재혼의 이혼율은 60%이며,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재혼부부들의 80%도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he London Observer, 2003. 2. 16.). 이와 같이 재혼가족의 이혼율 증가는 재혼가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4. 외국인과의 결혼증가

우리나라 혼인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로, 2005년 전체혼인의 11%(35,447건)를 차지하며 대상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이 72.3%, 한국여자와 외국남자는 27.7%이다. 한국남자의 91%와 한국여자의 71%가 아시아계와의 결혼이다. 한국여자의 경우 2000년 이후 그동안 혼인율이 높았던 일본인과의 결혼은 상대적으로 줄고 중국인들과의 혼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일본인, 미국인과의 결혼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중국인들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남성들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계와의 혼인이 주류이다.

외국인과의 결혼의 증가 및 남성의 중국 등 아시아계 여성과의 결혼증가 원인은 첫째, 결혼경사(Marriage Gradient)²⁾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혼인할 때 계층과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있으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상향결혼을 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농촌총각들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어려워지면서,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결혼경사도는 “2003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학력이 높고 전문직종의 여성의 독신 비중이 높다. 여성취업자 중 독신여성(35~44세)의 학력은 박사과정 32%, 석사과정 15%, 학사 9.8%, 고졸 3.6%의 순서로 학력이 높을수록 독신 비중이 커진다(여성 e-news, 2005. 4. 19).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파트너들이 남성에 비해 미국 등 서구인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남

2) 일반적인 동질혼 내에서 남성들은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그들보다 다소 낮은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최하의 남자들”이 결혼하지 못한 집단으로 남게 되고, 반대로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높은 “최상의 여성들”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결혼경사현상(Marriage Gradient)(Strong & DeVault, 1992)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남성들은 비자발적으로 미혼으로 남게 되며, 이 층의 비율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표 1> 연령별, 결혼지위별, 결혼에 대한 견해

2002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한다	모르겠다
15~19세	16.2	41.4	36.0	1.5	0.3	4.6
20~29세	17.7	47.0	32.1	1.4	0.2	1.6
30~39세	14.7	45.2	35.5	2.7	0.3	1.5
40~49세	20.8	46.2	29.5	1.8	0.2	1.4
50~59세	37.3	43.9	16.2	1.3	0.2	1.2
60세 이상	54.0	33.6	9.5	1.0	0.2	1.7
미혼-남	23.6	49.8	23.1	0.6	0.2	2.7
미혼-여	10.0	39.9	44.9	2.1	0.3	2.9
유배우-남	32.5	47.2	18.1	1.0	0.2	1.1
유배우-여	21.1	41.0	33.5	2.9	0.3	1.3
사별-남	48.8	35.1	11.7	0.4	1.0	3.0
사별-여	51.3	31.6	13.1	1.4	0.1	2.5
이혼-남	17.9	44.0	31.7	2.2	0.2	3.9
이혼-여	9.9	33.7	47.6	5.3	0.9	2.6

*자료 : 통계청(2002)의 사회통계조사

성들은 비교적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진 아시아계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여성들의 가부장적인 남성에 대한 거부로 배우자선택에 대한 태도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혼경사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는 않지만, 홍문식(1995)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 특히 셋째 및 넷째 아이의 높은 성비가 장래 결혼시장의 혼란을 야기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조적으로 혼인율 감소와 외국인과의 결혼증가현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선족의 위장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됐던 중국인과의 국제결혼 절차가 2003년 7월 간소화됨에 따라 이들과의 결혼이 2004년 이후 증가한 것을 볼 때(통계청, 2004) 앞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증가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II. 혼인율과 출산율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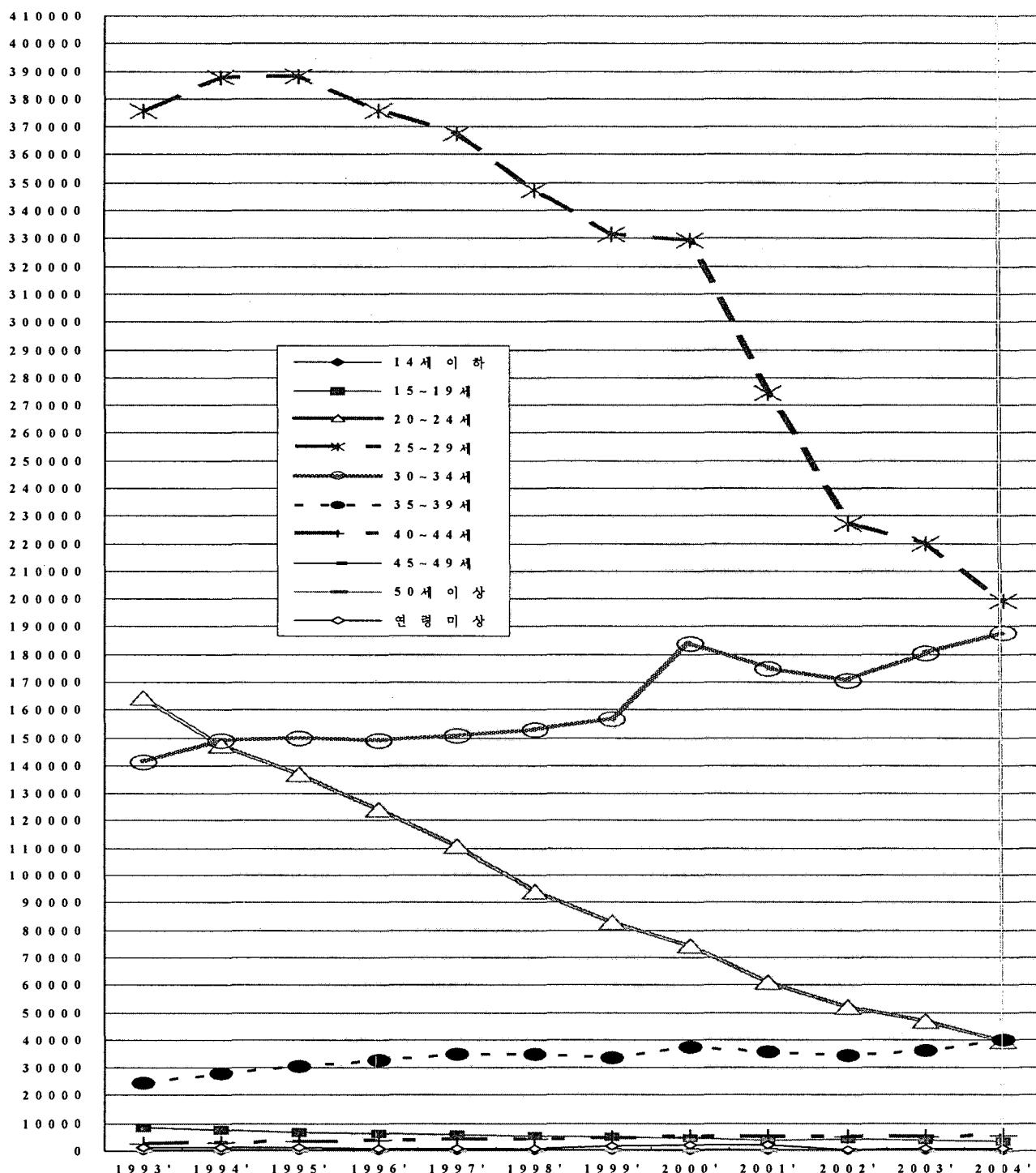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인구는 정치적 힘과 군사력을 의미했으며, 이런 논의가 EU통합 추진에 기여했다(Hantrais, 2004). 우리나라 경우도 국가 노동인구(예: 보건복지부, 2000; 이동원·박재홍, 1990; 이연주, 2003)의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하락³⁾ 때문에 혼인율과 출산율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생자수는 1970년

3)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결과를 인용,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 합계출산율 1.19명(2003년 기준)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10년까지 4.56%, 2010년대는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0년대는 2.91%, 2030년대는 1.60%, 2040년대에는 1%에도 못 미치는 0.74%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조선일보, 2005. 10.18).

이후 2004년까지 35년 동안 반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현재 출산율을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20년 4천9백만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자수 감소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출산율과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거부인가도 살펴보자 한다.

우선 사람들과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 결혼지위별 차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비록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的 비율이 나이가 어릴수록 높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어, 여전히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혼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결혼지위가 여전히 중요한 혼인의 유인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혼인율 감소보다는 앞장에서 지적한 요인들 중 여성들의 고학력과 취업으로 인한 만혼현상과 원치 않는 자녀를 조절하는 피임방법의 발달,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결혼의 자연, 결혼경기도 현상으로 인한 결혼대상자의 부족 등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 1>에서 이혼한 여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혼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만큼 취업과 출산율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혼인율과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 통계청의 시계열자료에서 재분석

<그림 4> 여성들의 연령급간별 출산자녀수: 1993-2004년

요인 중 하나가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윤소영(2005)의 자녀출산계획여부에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출산이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나 보육시설확충,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정책 등이 중요한 영향변인

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여성의 출산계획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을 지속하다, 출산을 위해 중단한 경우 이상적인 자녀의 수를 2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출산 후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다. 육선희(2003)의 연구에서도 20~30대 기혼성인 남녀의 1.3%만이 무자녀

를 선호하였으며, 이상적인 자녀수는 2.3명이었다. 또한 양 성은(2004)은 우리나라 20대 미혼대학생들이 매우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을 유자녀가족으로 동일시하며, 무자녀부부를 불임으로 인한 불쌍한 부부, 혹은 자유로움과 자아성취를 강조하는 이기적인 부부로 보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20대 성인남녀에 대한 심복기와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 미혼자들의 70%가 여전히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기혼자들도 79%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 기피 현상을 꼽고 있으나, 출산율은 결혼연령의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취업유무는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기 보다는 추가자녀를 갖고자 하는 선호여부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여정성, 1994).

또한 연령별 출산자녀수 분포를 보면 출산율 감소는 무자녀부부의 증가가 원인이라기보다는 3명이상 자녀를 낳은 부부의 감소가 더 큰 원인이다. <표 2>에서 2000년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연령급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평균자녀수는 2.5명이며, 30대 중반이후 각 연령별 결혼인구는 97%이상이며, 나이가 젊을수록 3, 4째 자녀 출산이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원치 않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전광희 2002)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0대 초반여성의 60%와 30대 후반 여성의 68%가 두자녀 가족이다. 즉, 20대도 무자녀나 한자녀가족이 높은 수를 차지하나 이는 연령적 특징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족에서는 2자녀를 선호하며, 결혼기간이 증가

<표 2> 2000년 기혼여성의 연령급간별 출생자녀수

연령	15세 이상 여자	기혼여성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미상	총출생자녀수	평균	
계	18,359,209	13,760,791	75%	783,392	2,134,188	5,709,309	2,268,444	1,205,398	797,818	460,062	235,320	102,451	36,237	19,158	9,014	34,921,043	2.5
	비율	0.06	0.16	0.41	0.16	0.09	0.06	0.03									
15-19	1,776,963	11,925	0.7	6,791	3,855	843	174	0	0	0	0	0	0	0	262	6,063	0.5
	비율	0.57	0.32	0.07	0.01											0.02	
20-24	1,817,901	203,803	11	89,313	87,610	24,391	1,683	135	21	45	0	0	0	0	605	142,356	0.7
	비율	0.44	0.43	0.12	0.01	0.0006	0.0001	0.0002								0.0003	
25-29	2,039,166	1,229,458	60	300,124	521,370	374,379	30,063	1,555	156	54	23	0	0	0	1,734	1,367,803	1.1
	비율	0.24	0.42	0.30	0.02	0.001	0.0001	0.0004	0.00001							0.001	
30-34	2,024,303	1,810,599	89	124,875	438,557	1,096,783	140,209	8,096	845	152	29	10	0	0	1,043	3,090,554	1.7
	비율	0.07	0.24	0.60	0.08	0.004	0.0004	0.0001	0.00001	0.00001						0.001	
35-39	2,068,831	1,981,797	96	69,696	308,158	1,346,576	231,837	20,869	2,995	472	158	71	11	0	954	3,799,878	1.9
	비율	0.04	0.16	0.68	0.12	0.01	0.001	0.0002	0.0001	0.00004	0.00001					0.001	
40-44	1,966,124	1,916,136	97	54,095	285,739	1,235,659	284,637	45,401	7,586	1,681	370	102	54	0	812	3,844,480	2.0
	비율	0.03	0.15	0.64	0.15	0.02	0.003	0.0008	0.0002	0.00005	0.00002					0.0004	
45-49	1,455,367	1,429,515	98	31,792	148,354	750,298	375,635	94,430	21,726	5,238	1,100	292	62	28	560	3,304,517	2.3
	비율	0.02	0.10	0.52	0.26	0.07	0.02	0.003	0.0007	0.0002	0.00004	0.00001				0.0003	
50-54	1,164,867	1,152,469	99	21,694	90,945	406,135	400,711	161,485	51,906	14,486	3,517	778	186	126	500	3,131,543	2.7
	비율	0.02	0.08	0.35	0.35	0.14	0.05	0.01	0.003	0.0006	0.0001	0.0001	0.0004				
55-59	1,008,507	1,000,929	99	19,387	65,701	193,915	316,952	234,189	113,088	40,200	12,428	3,444	818	353	454	3,273,334	3.3
	비율	0.02	0.07	0.19	0.32	0.23	0.11	0.04	0.01	0.003	0.0008	0.0003	0.0004				
60-64	952,161	946,837	99	14,378	51,512	103,100	211,770	247,485	181,571	87,819	34,113	10,424	3,072	1,188	405	3,679,741	3.9
	비율	0.02	0.05	0.11	0.22	0.26	0.19	0.09	0.04	0.01	0.003	0.001	0.0004				
65-69	782,292	779,089	99	15,505	43,149	63,682	119,824	177,463	171,565	107,610	51,277	20,602	5,678	2,480	254	3,343,786	4.3
	비율	0.02	0.06	0.08	0.15	0.22	0.22	0.14	0.07	0.03	0.007	0.003	0.0003			0.0003	
70-74	569,892	567,742	99	14,872	37,337	48,665	66,503	98,796	116,462	92,539	54,952	24,349	8,822	4,129	316	2,568,654	4.5
	비율	0.03	0.07	0.09	0.12	0.17	0.20	0.16	0.09	0.04	0.02	0.007	0.0005				
75세+	732,282	729,973	99	20,868	51,900	64,879	88,440	115,493	129,895	109,764	77,353	42,379	17,534	10,854	614	3,368,281	4.6
	비율	0.03	0.07	0.09	0.12	0.16	0.18	0.15	0.10	0.06	0.02	0.01	0.0008				
미상	553	519	2	1	4	6	1	2	2	0	0	0	0	501	53	0.1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각년도에서 재구성

하면서 한자녀가족의 출산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 이후 지속적이며, 여성들의 연령급간별 출산자녀수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그림 4>.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연령은 <그림 4>와 같이 20~24세, 25~29세 출산은 감소하며, 30~34세, 35~39세, 40~44세 출산은 상대적으로 증가패턴을 보여 만혼으로 인한 출산연령증가가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고 결론내리기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출산율은 혼인율 감소와 여성의 취업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1) 여성들의 고학력과 취업으로 인한 만혼현상과 2) 원치 않는 자녀를 조절하는 피임방법의 발달, 3) 베이비붐 세대와 그 자식세대가 결혼연령을 벗어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율 감소, 4) 혼인연령의 증가 및 합리적 선택에 의한 소자녀 출산경향, 5) 결혼시장의 구조변화 및 6) 결혼과 가족에 대한 평등적 가치의 확산 등이 종합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위한 현재의 단기적인 조치들⁴⁾의 효과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러한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부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출생코호트에 따른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s)의 계산을 통한 정확한 원인과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IV. 혼인율과 출산율 변화를 통해 본 가족정책 제언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혼인율의 특성과 변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미시적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1970년 이후 혼인율은 경제상황, 인구구조, 개인의 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초혼과 재혼연령의 상승과 재혼율 증가와 재혼의 구성비의 변화, 외국인과의 혼인이 우리나라 혼인율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혼인율 변화의 거시적인 원인은 M자형의 패턴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젊은이들의 만혼경향으로 일정기간 결혼을 늦추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결혼시장에서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혼인제도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4) 교육부는 직원 중 셋째를 낳으면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하며, 모성보호실을 설치하고 셋째는 청사 어린이집에서 우선 보육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이다(조선일보, 2005. 10. 18.). 세 자녀 이상 무주택가족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조선일보, 2005. 10.1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억제 위한 재원조달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5. 10. 8.).

볼 수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의 혼인율 변화 양상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 및 결혼 후 일과 가족을 조화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결혼에 대한 의미와 태도변화, 가족의 기능변화로 인해 결혼으로 얻게 되는 이익감소와 결혼에 대한 사회화 부족이 원인이다. 또한 출산율은 혼인율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의 고학력과 취업으로 인한 만혼현상과 원치 않는 자녀를 조절하는 피임방법의 발달, 베이비붐 세대와 그 자식세대가 결혼연령을 벗어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율 감소, 혼인연령의 증가 및 합리적 선택에 의한 소자녀 출산경향, 결혼시장의 구조변화 및 결혼과 가족에 대한 평등적 가치의 확산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미래의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매우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분석하였듯이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감소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매우 지속적이며, 규범적이며, 예측 가능한 변화의 결과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일어난 1차 인구혁명인 저출산, 고령화 및 그로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이혼, 동거, 혼외출산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특징인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2차 인구학적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 한꺼번에 나타나, 그 변화에 적응하거나 준비할 기회도 없이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혁명(Giddens, 1999; Skolnick, 1991), 혹은 가족전쟁(Glenn, 2002; Hay, 1996)으로 명명되지만,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을 여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현재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붕괴로 인식하며, 전통적인 가족, 즉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장기적이고 규범적인 변화로 인식하여, 이에 적절한 예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비현실적인 합계출산율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혹은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인구수가 몇 명인가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기초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EU 국가나 미국의 인구증가가 궁극적으로 이민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인구유입에 따른 이들 국가의 문제점들(예: 독일에서 터키인들의 문제,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방리유 사태 등)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시아계 노동인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 극복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행위를 정확히 진단 예측하기 위하여 완결출산율 등과 같은 새로운 통계수치를 계산하여야 하며, 가족행위를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인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행위로 해석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변화양상을 통한 분석보다는 시계열적인 자료를 통한 장기적인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 여성부에서 발표한 2005년 8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정책 방향 설정·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한국형 가족 비전 등을 포함한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적 요구 파악을 위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며, 2005년 11월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이념과 가치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획단적인 실태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기존의 통계청의 결혼가족관련 자료들을 시계열적으로 재분석하여 한국 가족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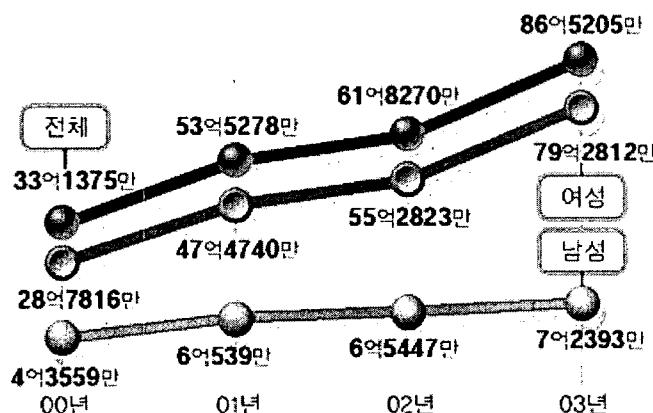
셋째, 현재 출산율 증가에 관한 가족정책의 효과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출산율과 혼인율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율과 혼인율의 인과관계를 가정한 인구증가정책은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평균초혼 및 재혼연령의 상승, 재혼구성비의 변화 등의 특성은 여성의 고학력화 및 취업 증가에 의해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늦추거나 변화시키고자하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가족정책을 비교한 Gilbert와 Van Voorhis(2003)의 연구에 잘 나타난다. 이들에 의하면 유럽연합 15개국의 가족친화적 정책은 미국에 비해, 특히 출산휴가, 아동/가족수당, 휴가기간, 공사영역에서의 일, 가족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분이 우수하지만 유럽국가의 출산율과 혼인율

은 미국보다 낮다. 1987년에서 1997년을 비교해보면, 이 기간 동안 15개국 중 12개국의 탁아지원복지기금이 45% 증가하였으나, EU의 결혼률은 6.1에서 5.1로 감소하고, 출산율은 1.44에서 1.58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기금의 증가에 비해 개별가족의 평균 금전적 혜택은 감소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가족친화적”정책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 가족생활 유인책으로 작용된 것이다. 이런 정책은 가족이나 결혼제도를 지원하기 보다는 유치원이나 탁아소, 방과 후 지원 등 주로 공적인 지원을 하는 매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가족 밖으로의 보육비의 지원은 어머니들을 더 일하게 하는 유인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부모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을 무료로 이용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간접적으로 세금율을 높이게 되는데, 무료탁아를 위해서 먼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 혜택을 이용해야하는 내재된 인센티브로 작용된다. 동시에 이런 체계는 엄마들을 더 일터로 보내게 되고, 봉급생활자들은 이러한 세금부담으로 평균적인 가족들의 경우 월급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진다.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공적으로 지원된 사회복지활동은 스웨덴의 전체 직업의 약 3/4를 차지하는데 이는 여성이 차지한 거의 모든 직업을 포함한다. 이처럼 가정에서 행해지던 다른 가사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공적인 것이 되어 여성들은 더 일을 하게 되고 출산율도 감소하게 된다(Hantrais, 2004).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Norway는 1998년부터 3살이 될 때까지 정부보조의 탁아소 대신 아동을 부모가 집에서 보육할 경우 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부모가 탁아기관의 양육과 부모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많은 부모들이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것을 선택했다. 핀란드도 노르웨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 방법 역시 일하는 부모들만을 위한 혜택인 스웨덴의 집중적인 공적탁아비용지원과는 대조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으

<표 3> 중요 EU의 1930-1960년 출생코호트의 완결출산율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프랑스	2.63	2.57	2.41	2.22	2.11	2.13	2.10
독일	2.18	2.16	1.97	1.80	1.72	1.67	1.65
네덜란드	2.67	2.49	2.22	2.00	1.89	1.87	1.85
덴마크	2.36	2.38	2.24	2.08	1.90	1.84	1.90
핀란드	2.46	2.29	2.04	1.88	1.86	1.90	1.96
스웨덴	2.12	2.14	2.05	1.98	2.00	2.03	2.04
영국	2.35	2.41	2.36	2.17	2.03	2.01	1.97
이탈리아	2.28	2.28	2.14	2.09	1.89	1.80	1.66
벨기에	2.42	2.39	2.23	2.08	1.97	1.90	1.81
아일랜드	3.50	3.52	3.23	3.27	2.99	2.67	2.41

*자료: Hantrais, L.(2004). p. 22에서 재정리



*자료: 2005. 2. 23.(서울신문)

<그림 5> 불임증 진료비(단위: 원)

로 두 나라 모두 <표 3>과 같이 스웨덴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Hanrais, 2004). 이러한 결과는 시장에 의한 직접적인 아동양육혜택이 가족생활에서 모의 노동을 보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는 학자들이 Schumpeter가 부모역할의 즐거움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어떤 부부는 무자녀를 선택하지만 더 많은 부모들은 부모역할의 심리적, 영적기쁨을 고려해 한자녀 혹은 두 자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유인책이 지나치게 시장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즉,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제도 조성을 통한 출산율 증가 정책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기 않다는 것을 유럽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국가들과 미국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이민을 통해 인구감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산율 1.6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가족정책을 위해 또 한 가지 고려할 내용은 불임가족에 대한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불임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 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2004년 4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자료에서 불임부부가 모두 64만 쌍에 이른다(이기우 의원 추산 통계). 1994년의 25만 쌍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배우자가 있는 가입여성(15~39세)의 14%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도 불임발생률을 13.5%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통계에 의하면,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건수는 연도별 차이가 있으나 1995년 이후 2001년까지 연간 평균적으로 만5천

건 이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5> 참조). 보건복지부의 2006년 저출산 대응 예산은 266억 원으로, 이 가운데 82%인 213억원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에 집중 배정됐으나(2005. 11. 15. 국민일보), 그 시효성에서 많은 반발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출생자수는 약 77만 명으로 이중 첫째자녀가 49만 명, 둘째가 24만 명, 셋째가 4만천 명이다(통계청, 2005). 예를 들어 3째자녀를 낳을 때 10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003년의 경우 그 비용은 약 410억원이다. 따라서 셋째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와 무자녀가족의 시술비용 지원 중 어떠한 정책이 더 효율적인가는 명백하다.

넷째, 가족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바탕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혼인율의 특징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재혼율 증가와 외국인과의 혼인증가이다. 이러한 가족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을 나름대로의 기능성을 가진 새로운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각은 매우 부족하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경제생활의 변화, 그리고 성역할의 변화는 오늘날의 가족생활양식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토플러는 앞으로 360여 가지의 가족형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가족을 보는 시각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두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만을 바람직한 가족으로 인식하여, 재혼가족(예: 김유경, 2005; 정지영, 2002' 정현숙 외, 2004; 현은민, 2002 등)과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예: 노영돈, 2000; 신광식, 2002; 이해경, 2005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은 매우 미미하며, 이들의 법적地位도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건강한 가족의 기준을 가족의 구성보다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변화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변화를 볼 때 결혼과 동거에 대한 새로

운 이해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출산자녀 중 1/2이상이 혼외출산이다. 왜냐하면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게는 “부부(couple)는 결혼한 부부와 합의에 의해 함께 사는 부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결혼생활과 같은 관계를 가지며 같은 집에서 살 때 합의에 의한 결합에 의한 파트너로 이해되어야 한다.”(UN/ECE, 1998, p. 71)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혼인율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거의 무의미하다. 결혼의 ‘상호보호와 만족’에 대한 차원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 결혼의 기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은 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가 점차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의 기능을 강조하는 예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가족법에서 잘 나타난다. 의사소통 패턴 및 역할 상호친밀감에서 이성부부와 동성부부의 생활방식과 상호작용이 거의 동일함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동성 부부간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하며, 스웨덴도 법적으로 결합을 한 결혼한 부부와 동거부부가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법적인 가족만이 보호받는 현시점에서 결혼만이 출산과 관련된다면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거도 결혼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율을 우려하면서도 해외입양이 많다는데서 혈연의식과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볼 수 있다⁵⁾. 이제는 결혼과 가족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가족을 사회와 사적영역의 경계 혹은 관계성 위에 위치시키며 고립된 영역이 아닌 자율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족현상 혹은 가족문화를 분석하며, 가족행동의 내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율의 변화가 인구구조와 제도적인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및 이를 통한 개인의 의식변화 등 총체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구조로서의 가족이 아닌 관계로서의 가족을 강조할 때 현재의 많은 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역할과 이들의 문제점에도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도 남녀간의 혼인에 대한 행동은 많은 차이를 보이며, 이들간의 의식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주도한 계층이 여성이었으며, 여성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피해자로 인식되어오면서 지금까지 성평등 논의 핵심은 여성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Goldscheider(2000)는 이혼의 증가로 아버지는 아이들

로부터 멀어지고,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일과 정치참여의 증가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서도 혁명적 변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 결과 아버지의 권리와 책임감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는 임신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도 여성이 결정하고, 아버지들이 이혼 후 자녀와 살지 않게 되고 아버지의 면접교섭권도 제한되지만, 경제적 부양의 책임은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는 등 남성에게 여성들과는 다른 불평등이 증가한다. 따라서 결혼에서의 평등을 위해 공동양육권과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릴 권리 및 부모-자녀관계의 위험성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 등의 대안이 요구된다. 이제는 결혼생활이 근본적으로 남녀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양성평등의 공존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의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을 전 생애과정을 통해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은 여성의 성역할태도나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등 개인적인 가치관과 가족관계가 출산계획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윤소영, 2005)와, 가족문제의 원인이 여성의 직업참여의 결과 수정되어야 할 가사 일에 대한 변화된 역할을 남성들이 기꺼이 그리고 잘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는 연구결과들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중요과제 중 하나가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은 “가족과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모든 과정”(Powell & Cassidy, 2001, 5)으로 정의된다.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비규범적인 특성에 대한 가족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높다. 그러나 가족관계 기술인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하다. 가족의 혁명(Giddens, 1999; Skolnick, 1991), 가족전쟁Glenn, 2002; Hay, 1996)시대에 살며, 남성의 삶에 혁명적 변화(Goldscheider, 2000)와 함께 아동 삶에도 혁명적 변화(Hernandez & Myers, 2003)가 일어나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가족들은 현재와 미래의 가족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비록 가족행위에 국가가 어느 정도로 관여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으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만,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가족관련 정책을 중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생활교육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5)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03년 공식적인 입양은 국내 1,560명, 해외 2,287명이다.

- 접 수 일 : 2006년 09월 15일
- 심 사 일 : 2006년 10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2월 07일

【참 고 문 헌】

- 가야마 리카(2005). 이윤정 역. 결혼, 달콤하고도 씁쓸한 유혹. 예문
- 가정법률상담소(2003). 재혼가정 실태조사. 200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자료집.
- 강현철 · 김기영 · 임성수(1994).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994년 한국통계학회 추계학술 발표회 논문집, 9-14.
- 공미혜(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태러리즘으로서 아내 구다. 1997년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 공미혜(2002). 기혼여성의 결혼 불만족과 혼외관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0, 195-208.
- 김경신 · 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4). 미혼남녀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 김유경(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체계. 보건복지포럼, 103, 47-72.
- 김혜련(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영돈(2000). 국적법상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 지위. 시민과 변호사, 78, 72-75.
- 박민자(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배선희 · 김순옥(2001). 기혼남성의 고부관계 인식 - 장남 역할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51-66.
-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5, 225-259.
- 신광식(2002). 우리도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 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들의 고충, 취업 가능 F2 비자 받기 '하늘의 별따기' 뉴스메이커, 11(10), 48-49.
-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옥선화(2003). 20, 30대 기혼남여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지각 수준과 저출산대책.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심포지움 자료집, 27-46.
- 양성은(2004).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른 대학생들의 무자녀 가족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49-159.
- 윤소영(2005). 저출산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9-167.
- 온기수(2002). 출산력 추이와 그 변화의 요인.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 포럼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 발표문.
- 이동원 · 박재홍(1990). 여성의 취업, 출산율,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4, 153-170.
- 이선미 · 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203- 220.
- 이시원 · 김영기 · 이성진 · 하상근(2004). 출산감소의 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8(4), 207-231.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5.
- 신복기 · 김기태 · 류기형 · 박병현(1997). 결혼과 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 67-103.
- 장혜경(2004). 저출산시대의 여성정책 방향. 여성정책포럼, 5, 50-54.
-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305-323.
- 정지영(2002). 장화홍련전: 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겨울), 422-441.
- 정현숙(2004).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기초로서의 동북아 가족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편),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299-340). 동아일보사.
-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정현숙 · 유계숙 · 전춘애 · 천혜정 · 임춘희(2000). 재혼가족의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20.
- 중앙고용정보원(2005). 2003년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최경수(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개발원.
- 통계청(2004). 2003년 혼인 · 이혼통계 결과.
- 통계청(2005). 2004년 혼인 · 이혼통계 결과.
- 통계청(2005). 2003년 출생 · 사망통계 결과.
- 한국가족학연구회(1995).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 현은민(2003). 재혼가족의 아동: 가족적·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대책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101-126.
- 홍문식(1995). Boy preference and imbalance in sex ratio in

- Korea.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2(1), 151-164.
- Bigner, J. J.(1979).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Y: Macmillan.
- Browning, D.(2000). *What is Marriage? An exploration*. (www.uchicago.edu/divinity/family).
- Eurostat(2002). *European social statistics: Demography*.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European Communities.
- Furstenberg, F.(2003). Future of marriage.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pp. 171-177). Boston: Allyn & Bacon Pub.
- Hantrais, L.(2004). Family policy matters: responding to family change in Europe. Bristol, UK: The Policy Press.
- Hernandez, D. & Myers, D.(2003). Revolutions in children's lives.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pp. 263-272). Boston: Allyn & Bacon Pub.
- Gallinsky E.(2003). What children think about their working parents. In A. Skolnick & J.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pp. 273-285). Boston: Allyn & Bacon Pub.
- Gerson, K.(2003). Children of the gender revolution: Some theoretical questions and findings from the field.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pp. 103-114). Boston: Allyn & Bacon Pub.
- Giddens, A.(2003).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pp. 17-22). Boston: Allyn & Bacon Pub.
- Glenn, N.(2001). Social science findings and the family wars. *Society*, 38(4), 13-22.
- Goldscheider, F. (2000). Men, children and the future of the family in the third millennium. *Futures*, 32, 525-538.
- Hays, S.(1996).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 Hernandez, D. & Myers, D.(2003). Revolutions in children's live.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pp. 263-272). Boston: Allyn & Bacon Pub.
- The London Observer(2003. 2. 16). Love is a scientific experiment.
- Mason, M., Fine, M. & Carnochan, S.(2003). Family law in the new millenium: For whose families?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 (pp. 76-94). Boston: Allyn & Bacon Pub.
- Gilbert, N. & Van Voorhis, R.(2003). The paradox of family policy. *Society*, 40(6), 51-56.
- Powell, L. & Cassidy, D.(2001). *Family life education*.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 Skolnick, A. & Skolnick, J. (Eds.)(2003). *Family in transition*(12th ed.). Boston: Allyn & Bacon Pub.
- Strong, B. & DeVault, C. (1992).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5th eds.). St. Paul: West publishing Company.
- UN/ECE(1998). *Recommendation for the 200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in the ECE Region*. Statistical Standards and Studies(no. 49). NY: United Nations.
- Waite, L. & Gallagher, M.(2000). *The case for marriage: Why married people are happier, healthier and better off financially*. NY: Doubleday.
- Waren, E. & Tyagi, A. W.(2003). *The two income trap: why middle class parents are going broke*. Cambridge, MA: Basic Books.